



“과학계에 실질적 도움되는 소통의 공간 많이 만들터”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장 duckhwan@sogang.ac.kr

Q ‘교육’과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소감과 각오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야를 한꺼번에 다뤄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반영해서 ‘맞춤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목소리, 정부입장, 국민의 목소리를 중계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께는 자부심과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이 가장 시급한 과제”

Q 과학기술은 전통적으로 여야의 구분이 없이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그런 전통이 유지될까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야 할 우리가 여야를 구분하면서 대립한다는 것은 어리석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짓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

다는 생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경제발전과 연결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Q 우리 과학기술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자 염원인 과학기술인 연금, 정년 연장, PBS 제도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득하게 노력을 해 성취 사례를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PBS제도 개선과 더불어 과학기술인들의 노후보장문제가 핵심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원로과학기술인들께

서는 과학기술인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돈벌이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여 기술을 개발해야 할 연구자들에게 은퇴 후에 생계를 유지해나갈 방법이 현재의 국민연금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인들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연구자들의 연금을 보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예산을 확정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법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

Q 과학기술계가 상당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돌아서서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평도 많았습니다.

과학기술계와 정부와 소통하는 통로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목소리를 들었고, 국정감사기간 중에도 이를 동안 대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원로과학기술인들의 모임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당부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개최하여 과학기술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정부가 내세운 GDP 5%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국가 총 R&D 투자의 75% 이상을 민간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 R&D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2003~2006년에 13.3%였으나 2007~2012년까지 16.6%까지 제고해야만 합니다.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를 높이는 등 대폭적인 R&D 관련 조세 감면정책 등



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교육’에 밀려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들어 처음 하는 국감이었습니다. 국감 기간은 그대로인데 절대적 시간 배분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만 과학기술분야의 제도, 운영, 장기적인 전망, 기초원천기술 지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교과위 위원들이 과학기술분야를 공부하고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들의 어렵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과학에 대한 소양과 관심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됩니다. 물론 이 정도로 만족하고 안주하지는 않겠습니다. 국감 끝난 후 위원회 주최로 원로과학기술인과 만남을 가졌고, 40, 50대 중견과학기술인과 간담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서 과학기술수석 분리방안 고려”

Q 그 동안 엄청난 투자가 이뤄졌지만 과학기술계가 내놓은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학기술계가 내놓은 성과가 없다는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5일 핵융합장치인 KSTAR에서 최초로 플라즈마를 발생하여 미래 전력 생산에 중심이 될 핵융합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선두주자임을 확인시켜줬으며, 2009년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KSLV-1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적다



는 지적은 옳지 않으며 도리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과학기술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급증으로 봅니다. 또한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우주개발, 핵융합, 줄기세포연구 등 거대과학 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현재 관점에서 당장 경제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탁월한 연구 업적이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결코 세계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구 성과물을 산업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부총리제에서 (구)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기부총리, 과학혁신본부가 없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과학기술부 분리를 추진하는 것을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 존재하는 과학기술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과학기술 정책결정, 예산배분, 사업평가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R&D 예산배분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면 R&D 사업평가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환원하여 과학기술계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체제 개선도 고려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청와대의 과학기술수석은 교육과학문화수석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문부과학성이라고 하여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한 부처로 만들었으나, 과학기술 특임장관을 신설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최근 정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5년 간 8천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본래 10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다수의 대학에 나눠 먹기 식으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특성화를 함께 진행시켜 나가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변질해서는 안 돼”

Q 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과학기술계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 나라 기초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의 본질은 기초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비롯해서 얼핏 연관성이 없는 네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바로 비즈니스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의도는 기초과학에 중점을 두었는데 대선 공약이 되면서 변질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초원천기술분야와 융합기술단계의 연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가차원의 R&D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집행과정도 전문가들에게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20년 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주개발, 핵융합, 줄기세포연구 등 기초과학 기술 분야는 현재의 관점에서 경제성을 따질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1960, 70년대 당장 끼니 걱정으로 힘들었던 시절에도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의 노력이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어 우리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꿈과 희망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은 우리 나라의 기초체력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과학기술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향상의 최선봉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연구개발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약력	
▶ 학력	
1975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6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입학 후 2년 재적, 복학 후에 1987년 졸업
1994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력	
2008년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6년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장
2003년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200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999년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 공동대표
1995년	민주당 4대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수석 부대변인
1991년	민주당 부대변인, 당무기획실 부실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